

대검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명태균게이트 철저히 수사하겠다" 검찰의 답변 받아내!

- 진상조사단, “윤석열, 김건희 소환 조사하라. 명태균 핸드폰 증거인멸 교사 의혹 담당검사 즉각 감찰하라.” 강력 촉구
- 기자회견문 낭독 후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와 약 1시간 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박정현, 이성윤, 서영교, 염태영, 박균택, 김기표 의원(사진 좌측부터)

23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영교 단장과 김기표, 박균택, 박정현, 염태영, 이성윤 위원 등은 윤석열, 김건희의 소환 조사 촉구와 검찰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감찰 요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작년 11월 창원지점에서 작성된 이 수사보고서는 대

점에 보고되었을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대통령, 대통령 부인 등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 멈춰선 창원지검의 수사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카톡, 텔레그램으로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이 전달된 것은 창원지검의 포렌식으로 밝혀진 내용이다. 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한 흔적도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며 “윤석열, 김건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 소환조사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화폰도, 개인폰도 모두 압수수색해야 된다.” 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총장은 창원지검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하라.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불법 여론조사,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창원산단 선정 국정개입 등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제기한 다수의 고발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앞에 철저히 진상을 밝힐 것” 을 강력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의원들은 대검찰청 내부로 이동하여 이진동 차장검사와 약 1시간여 간담회를 가졌다. 명태균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폐기하라’ 고 한 사태에 대한 검찰 요구와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반려 문제점을 지적했고, ‘충분히 유념하겠다’ 라는 이진동 차장의 답변을 받았다.

(끝)

***아래 브리핑 내용 첨부_브리핑 관련 서영교 단장 발언**

대검 이진동 차장과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비화폰, 핸드폰, 그리고 여러가지 증거들이 압수되어야 되지 않는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검찰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 등도 수사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검찰은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잘 유념해서 하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대통령 부인도, 특혜를 누려서는 안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씨 황금폰 관련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폐기시키지 그랬느냐, 우리도 부담스럽다” 라고 한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찰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빌미는 제공됐고, 답변이 궁색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하라” 는 이야기도 마저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반려한 것과 관련해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 시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왜 구속영장을 반려했느냐” 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기를 쓰겠다” 라고 했던 김성훈 관련해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했고, 경호처에서 총기를 쓰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킨다며 총기 운운한 문제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 압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면서,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반려한 것은 검찰이 법원에 그 영장에 관한 판단을 맡기면 될 것인데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유념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호처 차장에 관한 영장이 경찰에 의해서 청구된다고 합니다.

이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역사적 내란 관련해서 경호처 차장의 불법적인 행동, 이것은 구속을 통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이 영장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데 함께 협조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

<검찰은 윤석열·김건희를 당장 소환조사 하라!

검찰은 윤석열·김건희를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등으로 즉각 기소하라!>

검찰이 지난해 11월 4일 작성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었다. 보고서에는 명태균의 PC에서 복원된 윤석열·김건희와의 대화 캡처 파일 280여 개가 들어있다. 윤석열은 ‘대선 경선 이후’ 명태균과의 대화를 중단했다고 했지만, 명태균과의 대화는 2023년 4월까지 진행됐다.

11월 7일 윤석열은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하고 소통 방식이 달라야 한다 얘기하니까 (김건희)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선 이후에도 총선 공천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 지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다. 윤석열이 전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의 거짓 기자회견이 있기 한참 전,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윤석열의 ‘대국민 거짓말’ 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

했다. 또한, ‘명태균 여론조사’와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짓 해명을 내놔다.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은 윤석열·김건희에게 비공표 보고서,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를 수시로 전달했다. 명태균이 실질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 계산표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은 최소 1,600만원에 달한다. 명태균은 윤석열을 위해 무료 여론조사를 최소 4회 진행했고, 윤석열·김건희는 “충성”, “그래요”, “넵” 등 보고서를 받았다는 수신확인 메시지를 남기고,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했다.

명태균은 윤석열 캠프의 언론 대응, 메시지 전략, 고위직 인사 구성, 후원회장 추천 등 전분야에 걸쳐 깊이 관여했다. 명태균은 조언하고, 김건희는 결정하며, 윤석열은 이를 행동했다.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다.

최근 검찰이 김건희와 명태균이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논의한 추가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구체적인 공천 배치 상황을 공유하며 ‘적어도 120석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고, 명태균은 후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았으며 ‘그건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불법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요한 물증을 확보했고,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역시 여러차례 고발을 했음에도, 윤석열이 온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방조했다. 심지어 지금까지 윤석열·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인 것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11월 24일, 김용현에게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했다. 그리고 ‘12·3 윤석열 내란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12월 2일에는, 명태균의 법률대리인이 “명태균이 황금폰을 언론을 통해 제

출하거나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명태균게이트’가 ‘12·3 윤석열 내란사건’의 촉매제였던 셈이다.

검찰이 내란 사건 촉매제인 ‘명태균 게이트’를 신속하게 수사하였다면 12·3 윤석열 내란사건이 일어나지도,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과 병원쇼를 보며 온 국민이 내란 휴유증을 앓지도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의 휴대전화, 일명 ‘황금폰’ 3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곧 완료될 예정이다. 추가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총장은 창원지검의 봐주기 수사에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하라.

검찰은 지금 당장 윤석열·김건희를 소환조사 하라.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불법 여론조사,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창원산단 선정 국정개입 등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제기한 다수의 고발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앞에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12.3 윤석열 내란’ 주범인 윤석열의 버티기에 눈치를 보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25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군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